

Sang-Jin Han, ed.,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 What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Can Teach the World*

(London: Paradigm Publishers, 2012)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I. 분단과 과거사

한국인들은 종종 질문을 던지곤 한다. 왜 한국이 분단되었을까? 가장 간단한 답은 냉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가 분단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분단은 냉전시기에 분단 또는 분할 점령되었던 다른 국가, 즉 독일, 오스트리아,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한반도가 분단되었는가? 유럽에서 분할 점령된 국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였고, 이들은 전쟁 범주 국가였다. 독일 분할 점령의 기본적 목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다시는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독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점령에는 미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참여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시아에서의 분할 점령 국가는 일본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분단이 된 지역은 전범 국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었다. 바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이었다. 한국은 식민지로, 중국은 전쟁터로, 베트남은 5년간의 점령으로 일본의 태평양 전쟁 피해자였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에게는 분할 점령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또한 한국과 중국이 아직도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오스트리아와 베

트남 그리고 독일은 모두 통일되었다. 통일 과정이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체제가 동요할 때 통일을 이룩했다. 오스트리아는 제3세계가 형성되었던 1955년, 베트남은 닉슨독트린 이후 데탕트가 형성되었던 1970년대 중반, 그리고 독일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된 시기에 통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중국은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것일까?¹

이와 같이 1945년 이후 분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들 분단 국가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과거사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이들 분단국가에서는 수많은 과거사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 문제들은 때로는 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 간의 국제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과거사 문제는 일국 내 문제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즉, 독일이 점령했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프랑스 등 인접 국가,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학살 사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냉전 시기 구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에 의한 피해 역시 과거사의 중요한 문제이지만(조선일보, 2010/10/3), 나치에 의한 피해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총리 취임 80년을 맞아 독일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해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한국일보, 2012/2/2). 또 다른 전쟁 범죄를 자행한 국가인 일본의 경우, 정치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은 독일과 완전히 다르지만, 과거사에 있어서는 독일과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아시아의 분단국가인 한국과 중국에서의 과거사는 독일, 일본과는 달리 내부적인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다. 냉전 시기를 통해 내부에서 좌익과 우익, 보수와 진보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은 정치 세력 사이의 대립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이름 아래에서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묻히고 말았다. 타이완의 1947년 2·28 사건, 한국의 1948년 4·3사건과 1980년 5·18 광주민주항

¹ 이 문제 역시 과거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자들이 더 이상 정치활동을 못했던 독일, 오스트리아와 전쟁 협력자들이 계속 활동을 한 한국과 베트남은 정치지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전쟁 협력자였던 극우 보수세력과 좌파 세력 사이의 내부 갈등이 심각했고, 이 문제가 분단의 획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쟁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내부의 과거사 문제가 외부 세력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

이렇게 분단국가에서 발생한 과거사 문제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서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과거사 사건에 연관되어 있지만, 한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곧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과거사 문제의 기원이 되었으며,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과거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 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분단이라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해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면서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었던 한국과 독일, 그리고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범죄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뜻 보면 통일의 문제와 전쟁 범죄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의 과거사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전쟁 책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냉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패전국과 그 식민지 또는 점령지에서 냉전으로 인해 과거사 청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해결되었어야 했던 문제들이 냉전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고, 지연·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에서 전쟁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식민지 잔재 역시 이데올로기의 과잉으로 인해 제대로 청산될 수 없었다. 처벌받지 않았던 전쟁 범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다시 억누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과거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 책의 책임 편집자인 한상진은 분단 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의 해결은 곧 해당 국가와 그 지역의 평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² 특히 한국에서의 4·3 사건과 광주민주항쟁에는 미국의 책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4·3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었으며, 광주민주항쟁 시기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책의 필자 중 한 사람인 이시다 유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나는 독일에서의 단절과 일본에서 연속의 문제에 대해서 상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중략) 냉전은 빠른 재건을 위해 연합국의 점령정책이 패자에 대한 처벌부터 바뀌도록 했고, 이것은 과거 파워 엘리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상승작용을 가져왔다. (중략) 대부분의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군사정부를 장악하는 개발독재의 정치행태가 나타났으며, 개발독재자들은 일본의 경제 원조를 위해 일본과의 전쟁에서 고통 받은 대중들의 일본에 대한 비판을 억누른다(148~149).

이시다에 의하면 군사정부와 연결된 개발독재는 일본에 편승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했고, 이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독재는 냉전체제 하에서 이데올로기라는 칼날을 이용해 ‘학살’을 자행했다.³

그리고 이 과정은 한국의 분단과 통일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개발독재는 분단과 통일의 과정을 독재체제 유지에 이용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평화적 수단으로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붕괴시킴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전이나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열전은 모두 그 과정 속에서 발생했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고자 했던 독일은 통일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국제질서에서 지속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일까? 독일의 경우 전 독일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폰 바이재커(Richard von Weizsäcker)는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평화적 방법으로 과거사 청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

³ 대체로 태평양 전쟁을 전후해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원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1957년부터 배상을 명목으로 한 경제원조, 기술원조가 있었고, 한국 역시 1965년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일본의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Park(2012), 박태호·박태균(2004) 참조.

과거는 역사다. 그 과거만이 오직 역사이며 동시에 현재라고 정의될 수 있을까? 역사의 해석이 오직 역사가들과 그들의 논쟁에만 맡겨지면 되는 것일까? 우리 국가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역사의 해석과 정의에 참여할 책임이 없는 것인가? 나는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다(“Germany and Japan 50 Years after the End of Their Imperial Ambitions”, R. von Weizsäcker, Speech in Tokyo, August 7, 1995: 96).

이러한 역사에 대한 책임은 교육정책의 개혁에 의해서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교과서위원회를 만들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앞의 글: 100).

II. 세 개 층위의 필자들의 분석

이상과 같이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는 냉전체제 하에서 과거사 문제와 분단과 통일의 문제, 그리고 평화 사이에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다. 이러한 방정식이 모든 지역과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독일 그리고 한국 사회 사이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 중 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면서 이 문제가 모두 동시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책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세 가지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세 차원은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행위자들(agent)로서 최고 정책 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젊은 세대의 학생들이다. 먼저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는 최고 정책 결정자 중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 참여한 김대중 대통령과, 독일이 통일된 시기에 대통령이었던 폰 바이재커(1984-1994년 독일 대통령으로 재임)에 주목했다. 이 두 사람은 독일과 한국의 통일과 화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들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출했던 통일정책과는 다른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직후 이승우화의 한 이야기를 착안해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명명하였다. 이 책에는 햇볕정책의 기원이 되는 김대중의 연설을 수록하고 있다. 김대중은 1998년 4월 4일 영국의 SOAS(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남북

관계가 햇볕정책 하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당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정일을 만나기 3개월 전인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그는 이 연설을 통해 통일 전 독일의 동방정책(Ostpolitik)과 햇볕정책의 내용을 체계화했다.

이 책에는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 그의 주요한 연설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그의 업적에 대해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speech at University of Tokyo, 2003; “Willy Brandt’s Ostpolitik and the Sunshine Policy: What can the Koreans Learn?”,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y 21, 2009).

이 책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분단과 통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간의 과거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오부치 총리를 대표로 하는 일본 정부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김대중과 오부치 사이의 선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일이 되었지만, 이 선언에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를 비롯해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까지 한일 간의 합의와 화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일 간의 신세대 선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2000년의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이 2008년 이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1998년 한일 간의 신시대 선언이 2002년 일본의 납북자 문제 이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독일의 폰 바이재커 전 대통령은 과거사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주장하면서 1985년 5월에 행한 연설(“Reflections on the End of the War that divided Germany”)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거만하고 독선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미래의 행동을 위한 지침으로서 우리 역사의 기억을 회고한다면, 우리는 과거 40년간 우리의 발전에 대해 감사하면서 뒤돌아봐야 한다.

- 만약 우리가 제3제국에 의해 죽어간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의 책임감을 갖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봐야 할 것이다.
-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종, 종교,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폐쇄적인 경

계 앞에서 종종 죽음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진정으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되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 우리가 만약 독재 하에서 자유로운 사상에 대해 처벌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겨냥한 것일지라도 모든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 중동에서의 상황을 비판하는 누구든지 독일인들이 유대인 친구들에게 가했던 형벌을 생각해야만 한다.
- 우리가 만약 전쟁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동유럽 이웃국가들에 대해 생각한다면, 독일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러한 국가들과의 화해와 평화적 관계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2-43).

결국 과거에 대한 성찰로부터 국가 간에 나타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재커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과거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Germany, Europe, and Japan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Lessons, Changes, and Challenges”, A speech in Osaka, September 26, 2000).

두 번째 층위의 행위자들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의 학자들이다. 이들은 냉전 시대 과거사 문제와 분단 극복의 문제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도쿄대학 이시다 유지는 일본에서의 연속성과 독일에서의 단절성(the discontinuity in Germany and the continuity in Japan)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국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으며(148), 맥코맥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맥코맥의 글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냉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국적 차원과 다국적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과거사 문제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극우보수적 성향의 세 총리(고이즈미, 아베 그리고 야소)에 대해 정체성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우선적 고려, 전쟁 책임 부인, 일본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본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정주의, 그리고 일본의 전후 형성된 민주적 기제들에 대한 반대 등 네 가지 요소 사이에서 모순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171).

이제 마지막 행위자들은 차세대의 필자들이다. 이들은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할 것이며, 미래 사회에서 정책결정자와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학생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필리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글이다(Park Sae Seul, "Why do Filipinos Remember the Past in their Own Way?"). 이 글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한국·중국과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바이재커도 이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독일이 항복한 5월 8일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주는 날이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간 날이고, 다른 누군가는 집을 잃어버린 날이다. 누군가는 해방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전쟁 범죄로 인해 체포된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공습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날이었지만, 자기 나라의 완전한 패배를 경험한 날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인들이 그들의 환상을 깨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35).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편집자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성찰적 근대화'가 바로 그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인류에게 '발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는 동시에 인간의 생존 조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근대화를 통해 발전을 추진하는 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대 자체가 갖는 본질적 성격 때문이며, 생태 환경의 파괴,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전쟁, 식민지의 확산, 일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체제 차원에서 양극화의 확대, 인간 존엄성의 후퇴 등의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259~260).

근대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는 편집자의 제안은 발전 모델의 또 다른 대안으로 연결된다. 편집자는 물질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동아시아 사회에서 정부 차원이 아닌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소통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과거사의 복잡한 이슈를 분석하면서 3개 층위의 행위자를 통해서, 그리고 비교사적 방법을 통해 새

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국, 일본, 독일의 중요한 자료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III.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는 분단과 통일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과 독일, 그리고 국가 간, 또한 일국 내에서 과거사 청산의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 듯한 과거사 청산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가 냉전체제 하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무엇보다도 분단과 과거사 청산 문제의 핵심이 되는 냉전체제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냉전체제는 독일과 한국에서는 분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 일본 독립 후 10년도 되지 않아 수상에 선출되었다. 이렇게 탈식민 과정의 왜곡과 지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 다른 군국주의적 경향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창출했다. 이 과정에 대한 성찰은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일본에 대한 원자탄 사용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독일 사회와 일본 사회 내부에서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된다. 왜냐하면 원자탄의 사용은 독일과 달리 일본 사회에서 스스로가 가해자라는 생각보다 피해자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 책의 편집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책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근대’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1945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맥코맥의 글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 접근

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사 청산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victims)의 태도에 대한 문제 역시 필요하다. 폴란드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태도는 가해자인 독일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화해를 시도하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바이재커가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들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분명치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것은 일본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동남아를 일본의 경제적 배후지로 만들고자 했던 전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연결된 것이기도 했다(Cummings, 1984).

아울러 이와 반대로 이 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감정적 접근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한국과 중국 사회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극단적이며 부정적·감정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 극우 세력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역사 왜곡이 나타나는 것은 일본 사회 자체 내의 문제에 의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 사회의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이 일본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극우세력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한국과 중국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냉전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에 비해 늦어진 시민 사회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화해를 위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과거사 청산의 문제를 분단과 냉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를 영어로 출간함으로써 해외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문화적 관

점의 대안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3년 5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0일

참고문헌

- 박태호 · 박태균. 2004. “1960년대 아시아개발은행의 창립과정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1-18.
-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7), 1-40.
- Park, Tae Gyun. 2012. “The Rol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during the Cold War.” *Korea Journal* Spring, 206-231.

